

“요양병원에 코로나 치료제 최우선 처방”

팍스로비드 최우선 처방...라게브리오도 활용 요양시설 고령층의 경우 경증이라도 병원 이송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정부가 요양병원·시설에 대해 코로나19 치료제를 최우선으로 처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65세 이상 고위험군이 머무는 요양시설의 경우 경증 환자라도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병원·시설 코로나 사망자 현황 및 관리 강화방안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고받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고령의 기저질환자가 밀집한 요양병원·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한 조치로 마련됐다. 이번 달 기준 코로나19 사망자 가운데 요양병원·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32.7%로 확인됐다. 사망자 3명 중 1명은 요양병원·시설에서 나오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응해 우선 정부는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치료제 처방을 강화

한다.

그 일환으로 병원·시설 내 환자를 대상으로 화이자사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최우선으로 처방한다. 병용 금지 의약품 등으로 팍스로비드 처방이 어려운 경우 머크앤드컴퍼니(MSD)의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를 보완 활용한다.

요양병원의 경우 현장 의견을 수렴해 팍스로비드 공급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먹는 치료제 외 주사치료제인 ‘렘데시비르’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요양시설의 경우 65세 이상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 경증이라도 병원으로 즉시 이송하고, 이 밖의 코호트 시설 확진자는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의 처방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중증화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정부는 이들 시설 내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이들이 위·중증으로 증상이 악화하지 않도록 중증환자에 대해서도 병상배정 ‘하라인’을 통해 중증전담 병상으로 전환하는 등 의료진

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요양보호사와 간병인, 간호사 등 시설 종사자와 의료인력의 확진이 늘어 생긴 돌봄 공백에 대비해서는 보조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는 1일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의 현장실습을 재개해 돌봄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는 한편, 중앙 차원의 인력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요양시설에서 확진된 직접 돌봄 종사자의 격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이날부터 추진한다.

확진자가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요양병원 기능 연속성계획(BCP)을 개정해 3차 접종 완료 후 무증상인 종사자가 본인이 동의한 경우 격리된 확진 입소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날 공개된 이 같은 방안은 요양병원 내에서 확진자 발생 시 환자에 대해 해서만 이동을 막는 코호트 조치로 인해 확진되지 않은 환자들의 경우 코로나19 외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박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요양환자의 경우 대개 병원에서 코호트 격리가 진행되고, 확진되지 않은 환자들과 공동 관리하고 있어 의료진

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시설 부분에 있어 협력병원에서 초동 대처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어 논의를 거쳐 대응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 돌봄인이 부족해 돌봄 인력이 조기 투입될 수 있도록 돌봄 자격을 주는 날짜를 당겨 현장에 투입하거나, 자원 봉사자들이 돌봄 영역에 참여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또 증상이 악화할 때 중증 증상이나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상으로 후송 문제 등이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수도권 병상배정반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의료가 진행되도록 하는 배정방식도 강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30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7만 7000명 이상 늘어난 42만4641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432명으로, 역대 최다였던 지난 24일(469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 1월(1월2일 0시 기준)부터 이날까지 1만 230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하며, 올해에만 1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유유기자**



광양경찰, 사업용 자동차 교통안전활동 전개

광양경찰서(서장 장진영)는 불철을 맞이하여 상춘객 증가와 방역정책 완화에 따른 유동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관내 버스·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 운행 업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활동을 전개했다. **광양=심종섭기자**



나주경찰,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나주경찰서(서장 김선우)는 29일 동신대학교 대경3관 투게더 홀에서 나주 관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동승보호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기동취재본부**



여수경찰, 산업단지·항만 교통안전시설 개선 합동진단

여수경찰서(서장 정성록)에서는 지난 25일 원활한 물류이동을 위한 산업단지·항만 주변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진단을 실시하였다. **여수=오상호기자**



순천경찰, 무인방범시설 확충 추진 TF 회의 개최

순천경찰서(서장 최병운)는 30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가장 안전한 순천시 만들기’ 추진계획의 일환인 CCTV 등 무인방범시설 확충을 위해 TF 회의를 개최했다. **순천=김승호기자**



보성경찰, 이장협의회 회장단 ‘안전한 보성만들기’홍보간담회

보성경찰서(서장 오임관)는 29일 보성군청 소회의실에서 보성군청 관계자, 읍·면 이장협의회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보성 만들기”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성=김력순기자**



광주 남부소방, ‘청렴·공정·안전’ 청렴 마스크 배부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과 청렴 분위기 확산을 위해 청렴 로고가 새겨진 마스크를 제작해 배부했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정부, 거리두기 소폭 완화? ‘10명, 12시’ 방안도 정부가 다음주 적용될 새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를 앞두고 단계적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사진은 30일 서울시청 건물 기둥에 부착된 거리두기 캠페인 이미지 모습.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일시에 모든 조치를 해제하는 경우 유행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어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사적모임 10명, 시간제한 밤12시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광주 동구, ‘빛의 분수대’ 개막 무기한 연기

기술적 보완점 발견·기존 작품 무단도용 의혹 등 사유



‘기존 작품 무단도용’ 의혹이 제기된 광주 동구의 ‘5·18민주광장 빛의 분수대’ 개막식이 무기한 연기됐다.

동구는 오는 31일 옛전남도청 분수대 등에서 열릴 예정인 ‘빛의 분수대’ 개막식을 잠정 연기한다고 30일 밝혔다.

동구는 “지난 29일 최후 리허설 중 기술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발견됐다”며 “당초 계획했던 작품의 완성도

를 구현하기 위해 잠정 연기를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부 설치작품에 대한 기존 작품 무단도용 의혹이 불거져 연기가 결정됐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동구는 사업비 40억원을 들여 옛전남도청 분수대 등 5·18민주화운동 상징적인 공간을 활용해 도심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다. **기동취재본부**

사업의 일환으로 분수대 주변에 5·18을 형상화한 미디어아트 작품 설치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 중 한 작품에 대해 민족미술협회광주지부(광주민미협) 등 예술단체는 미디어아트 작품 ‘빛불’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A작가의 회화작품 ‘광장의 기억-분수대’(100호) 작품을 무단도용했다고 주장했다.

A작가의 작품은 5·18 당시 햇불을 들고 민주대성회가 열렸던 옛전남도청 분수대를 소재로 제작된 회화작품으로 지난 2014년 5월 갤러리 ‘생각상자’에서 처음 공개됐다.

이후 A작가는 옛전남도청과 관련된 작품을 다수 제작해 전시회 등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는 “미디어아트 작업을 하는 B작가가 사업 제안서와 포스터 등에 A작가의 ‘광장의 기억-분수대’를 이용했으며 협의 등은 전혀 없었다”며 “전시 등이 강행된다면 저작권 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 벌이겠다”고 주장했다. **기동취재본부**



‘기성용 성폭력 논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수사결과 기다리자”

축구선수 기성용(32·FC서울)씨가 성폭력 가해 논란 폭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역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관련 형사사건 수사절차가 마무리 된 뒤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기씨가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축구부 후배 A씨,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기씨 측은 “수사기관에는 재산상 손해·정신적 손해 등을 특정할 자료를 제출했는데 아직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어서 민사 재판부에는 내지 않았다”며 “임증할 만한 증거가 있고 재판을 최대한 빠르게 끝내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A씨 등 피고 측은 “(성폭력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이 아니고 위법성도 없다는 걸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면서도 “형사사건 내용이 정리될 때까지는 민사 재판부에는 제출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쌍방이 입증할 주장이 많은 것 같으니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다음 변론기일은 추후 지정하는 것으로 정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24일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C선수와 D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C선수가 기씨로 특정됐다.

이에 기씨는 A씨와 B씨에 대해 지난해 3월22일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양측은 기씨가 제기한 형사고소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경찰 대질조사까지 마친 상황이다. **이슬비기자**